

경제자료

「조선신보」 - 7·1 조치 관련 보도 동향 (2003. 6 ~ 2004. 6)

2002년 북한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시하였다. 주지하듯이 이 조치는 물가 및 임금인상, 공장·기업소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획기적인 경제정책의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KDI북한경제리뷰』는 2003년 6월호에서 “7·1 조치 1년 - 북한 언론의 7·1 조치 관련 보도 동향” 제하의 경제자료를 통해 북한 언론에서 밝히는 7·1 조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바 있다.

본 자료는 7·1 조치와 그 이후에 시행된 경제관리제도의 변화에 따라 공장·기업소, 시장, 식당 등의 봉사업 등에서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가를 현장 취재한 「조선신보」의 기사(2003. 6~2004. 6)를 정리한 것이다.

7·1 조치와 관련한 논의가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신보」가 밝힌 현장변화 내용은 사실확인 차원과 북한 당국의 조치 시행 의도를 파악한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작성: 김상훈 연구원 >
hmbkim@kdi.re.kr

변혁의 현장에서 - 두몫, 세몫 일해야 보람 (2003. 6. 28)

□ 여성의 직장복귀 증가

- “경제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조선에서는 가정주부들의 ‘직장복귀’가 늘고 있다”
- “‘일한 것만큼 분배를 받는다’는 원칙이 관철되게 되면서 ‘부양가족’으로 있던 여성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일어 난 것”

□ 농민시장이 종합시장으로

- “한 달에 약 10,000원의 수입이다(4인 가족). 최씨 일가는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공급하는 쌀을 사먹는다”
- “식구가 먹고 사는데 한 달에 1,600원이면 되고 아파트나 전기사용료도 400원을 넘지 않는다”
- “국영상점에 없는 것들은 시장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헐값은 아니지만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없는 수준은 아니다”
- “평양시 중심부에서는 중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농민시장이 운영되어 왔다. 거기서 거래되는 상품가격은 해당 행정단위에서 그 상한을 정했다”
- “시장에 나오는 상품도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니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적재부이며 국영상업망과 시장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변혁의 현장에서 - 성황을 이룬 평양국제상품전람회 (2003. 8. 25)

□ 물자 조달

- “사회주의시장이 존재하였을 때는 이른바 물물교환방식의 무역활동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자본주의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상품을 팔아야 필요한 물자를 사 올 수 있다”
- “지난 시기 조선에서 무역활동은 전문기관만이 담당·수행하였다. 경제관리를 개선하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개별적인 공장·기업소들도 필요에 따라 무역성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무역활동을 벌릴 수 있게 되었다”
- “조치 이후 경영실적에 따라서는 확대재생산을 위한 여유자금을 더 많이 쥌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또한 무역거래도 더 이상 전문기관의 독점물이 아니다. 국제상품전람회에 일반상점의 지배인이 찾아 와 외국무역업자와 거래활동을 벌이는 광경이 벌어 질 수 있게 된 것이다”

□ 제품의 ‘질 제고’ 인식 강화

- “자본주의시장으로 진출하자면 모든 상품의 질이 제고되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결국은 국내의 경제활성화에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변혁의 현장에서 - 평양신익주 ‘화장품 질 경쟁’ (2003. 9. 23)

□ ‘경쟁’ 인식

- “지난 시기는 경쟁의 관점이 뚜렷하지 않았다. 주된 관심은 나라에서 주는 생산지표를 달성하는데 집중되었다”
- “사회주의에도 경쟁은 있어야 한다. 다 좋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세계적 추세를 따라 갈 수 없다. 경쟁을 통해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여야 인민들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 “평양의 상점들에는 두개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 나란히 진열되는 경우가 있다. 나라의 가격정책에 의하여 비누나 치약의 가격은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품의 ‘질’이 구매자들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

□ 생산실적 평가의 변화

- “경제개혁이 실시되어 공장운영에 ‘번 수입에 의한 평가’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공장의 생산실적이 원자재공급에도 반영되게 되었다”
- “지금은 화장품의 원자재까지 100% 보장된다. 그만큼 무역관리국의 자금운영에 여유가 생긴 셈이다”

변혁의 현장에서 - 된장, 간장 판매량 2배로 늘인 식료품상점 (2003. 9. 27)

□ 생산량 증가

- “90년대 후반에는 화물차, 휘발유를 자체로 해결하고 공장앞에서 기다려도 생산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다. 당시 상점의 진열대에 상품이 얼마 없었던 것은 인민들의 수요에 비해 생산물이 적었기 때문”

- “경제관리의 방법이 개선되어 악순환의 고리가 단절되었다. 공장들에서는 생산 물이 최종적으로 도매되어야 번 수입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래야 노동자들도 상응한 보수를 받게 되었다. 필연적으로 공장과 상점사이의 송달공급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 “공장들에서는 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식료품상점에는 한 달에 두 번 기초식품공장에서 간장, 된장이 납품된다. 그때마다 필요한 상품을 주문한다. 상점에 들어오는 간장, 된장의 양은 지난 1년 동안에 2배로 늘었다. 구매자가 요구한 것만큼 생산물이 보장되기 시작한 것”

□ 임금 인상

- “상점의 매상고가 오르니 이곳 종업원들도 매달 2500~3000원 수준의 로임을 받고 있다. 작년 7월에 설정된 기본로임의 약 2배이다”

변혁의 현장에서 - 동업자들이 주목하는 소규모 ‘주민식당’ (2003. 10. 15)

□ 자율성 증대

- “규모가 작은 ‘주민식당(1970년대말, 가정일을 보는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하에 평양시내의 매 구역, 동마다에 개설된 단고기집을 비롯한 각종 식당)은 나라에서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여느 식당과 달리 일꾼들이 수완을 발휘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한다. 식당의 매상고에 따라 원자재의 구입량도 좌우된다. 최근 시기 경제개혁이 실시되어 공장·기업소들이 독립채산제를 실시할 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고 있으나 의암식당을 비롯한 주민구역의 자그마한 식당은 오래 전부터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온 셈”
- “작년 7월 생활비와 전반 가격을 조정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주민식당에서 봉사하는 단고기요리의 가격도 200~250원으로 설정”

□ 자금 활용의 자율성

- “의암식당 종업원들의 현재 로임은 작년 7월에 비해 150%수준으로 올랐다. ‘주민식당’은 매상고 가운데 일정한 비율을 나라에 상납하고 나머지를 종업원들의 로임과 식당운영에 돌리게 된다. 의암식당의 경우 70%는 원자재를 구입하는데 쓰고 있다”
- “개를 사들이면 사들인 것만큼 찾아오는 손님들이 더 많아진다”

변혁의 현장에서 - 과거의 부정이 아닌 체계의 재구축을 (2003. 10. 24)

□ 공장·기업소의 자율성 증대

-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취해진 작년이래 각 기업소들은 번 수입에 의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나라에서는 기업소가 번 수입을 가지고 국가납부와 종업원들의 생활비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계획을 달성하면 그에 상응하게 국가납부를 하고 로임을 지출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 총생산액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두 가지 선행항목을 충족시키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연합기업소가 번 수입의 분배 몫을 내부에서 어떻게 조절하겠는가, 지배인으로서는 항상 골머리가 아픈 문제이다. 경영관리에서 준비의 낭비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배인은 기업소 당위원회의 집체적 협의마당에서 실리추구를 위한 합리화안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 “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의하여 공장·기업소들이 필요한 자재를 서로 주고받고 조달하는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이 나오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공장·기업소들이 인민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생산하여 시장활동에 적극 참가할 데 대한 방침도 제시되고 있다”
-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도 오늘의 조건에서 나라가 허리 펴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다. 위가 아래를 도와주는 체계를 부정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 국가경제를 추켜세우면 다시 제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변혁의 현장에서 - 미래를 위한 선행투자 (2003. 11. 28)

□ 제품의 '질 제고' 인식 강화

-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제품의 질이 제고되고 제품이 질이 높아야 수익을 더 늘일 수 있다”

□ 자금 활용의 자율성

- “중전에는 확대재생산을 위한 설비투자가 나라의 몫이었다. 공장·기업소의 부기에 감가상각금이란 말은 있었으나 그 돈은 나라에 납부하였다. 각 단위는 나라가 새로운 설비를 해결해주는 것을 기다리면 되었는데 작년부터는 사회주의 경제관리가 개선되어 확대재생산을 위한 자금을 공장·기업소의 결심에 따라

변수입에서 지출하게 되었다”

- “원래 노동자들의 후방사업은 공장이 맡아보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큰 자금을 돌릴 수 없다. 현대화는 당장 풀어야 할 과제이다.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선행시켜야 할 때이다”

변혁의 현장에서 - 최고학부 대학생들이 배우는 실천적 경제학 (2003. 11. 29)

□ 교육내용의 변화

- “이전에는 생산확대의 일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 과정에 자재와 노력이 얼마나 지출되었는가, 말하자면 흑자인가 적자인가에 대하여 큰 관심을 돌리지 못했다. 실리에 대한 관점이 없었던 것이다”
- “대학의 교단에 선 지 40년이 되는 경제학부 인민경제계획과 리동구 교수는 지금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기 위한 방법론’을 대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중요한 대목의 하나가 국가의 통일적, 유일적인 지도를 보장하면서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발휘시키는 것이다”
- “지난날에는 국가계획을 세울 때 현물 즉 생산물을 위주로 보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생산지표만 주면 되었지만 그 과정에 얼마나 실리를 달성했는가를 따진다면 반드시 화폐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 “리동구 교수에 의하면 ‘무현금융통’을 전제로 한 재정금융학은 ‘현금융통’을 가르치는 과목으로 되었다고 한다”
- “특히 작년의 7·1 조치 이후는 학생들이 종래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 예컨대 이전에는 나라의 정책으로 가격이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능동적으로 조절하게 되었다”

인민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 낮은 가격으로 손님들을 모으는 창광거리식당들 (2003. 12. 8)

□ 가격 책정

- “나라에 손을 내밀지 않고 자체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다. 식당 운영을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원자재를 시장가격으로 사들였으니 음식가격도 좀 비싸

지만 그 맛에 대한 소문이 번져 특별음식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다”

- “최근에는 평양에 ‘합의제’라고 불리우는 식당이 나오게 되었다. 말하자면 국정 가격이 아니라 식당측과 손님들이 서로 ‘합의’한 음식가격으로 봉사를 하는 식당이다”

변혁의 현장에서 - 검증되는 개선조치의 생활력 (2003. 12. 22)

□ 실리의 강조

- “실리사회주의의 대담한 시도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정착되었다. 인민들도 나라의 재정부담으로 모든 생활이 보장된 과거를 이제는 먼 옛날의 일로 간주하고 있다”
- “실리중시의 원칙을 세워 경제의 모든 단위가 초행길을 걸었다. 우여곡절은 겪지만 경제부흥을 위해 다른 방도는 없으며 경제관리개선은 아마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 시장의 운영

- “조선에서는 오래전부터 협동농장 농민들이 자기 텃밭에서 나온 농토산물을 파는 농민시장이 있었다. ‘고난의 행군’시기 농민시장에 농민들 이외의 주민들이 진출하여 농산물이나 다른 공업제품을 팔게 되었다. 국가가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조건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물론 행정차원의 지도와 관리는 있었다. 판매자의 자격, 상품의 품종 등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구역행정이 이해하고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 “물자부족이 초래한 현상이었지만 그것은 ‘암시장’과는 구별되었다. 버젓한 규칙에 따르는 시장운영이었다”
- “국영기업소, 협동단체가 시장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난 시기는 개별적 주민들만이 등록되어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다. 지금 통일거리시장에 있는 판매대대의 약 5%는 공장·기업소의 몫으로 할당되고 있다”
- “한편 가격면에서는 행정의 조절, 통제기능이 더 잘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쌀, 기름을 비롯한 중요지표상품의 한도가격을 설정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라 10일에 한번씩 검토하여 ‘적절한 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 시장의 원리

- “통일거리시장을 비롯한 각지의 시장들도 새로운 방침이 제시된 후 국영기업소로 되었다. 종전에는 구역행정이 관할하는 ‘관리소’의 위치에 있었다”
- “기업소인 것만큼 시장은 상품을 파는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개별적 주민들로부터 ‘시장사용료’를 징수한다. 또한 시장에서 상품을 파는 단위는 이것과 별도로 자기 소득에 따른 국가납부금을 제때에 바쳐야 한다. 시장의 경제활동을 국가경제의 일부로 거둬들인 것이다”
- “지난날에는 국가계획에 따라 ‘무현금유통’으로 공장·기업소의 생산에 필요한 모든 연료, 자재가 보장될 수 있었지만 개선조치 이후는 각 단위가 현금을 쥐고 자기 결심에 따라 확대재생산을 진행하게 되었다. 올해부터는 국영기업소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계획에 따르면 공장·기업소는 기본제품의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인민생활필수품을 만들어 그중 30%를 국가납부를 하지 않은 ‘생산유지비’로 쓸 수 있다.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은 정해진 30%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생산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공장·기업소에 있어서는 국가계획의 초과달성이 시장거래의 매상고를 올리는 전제조건인 것이다”
- “국영기업소들이 시장에서 얻은 자금으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게 되면 국가유통망에 더 많은 상품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 국영상점의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도 점차 해소되어 나갈 수 있다”
- “지금 평양사람들은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우리 식’의 방법론을 부단히 탐구하고 있다”

인민들이 그려보는 실리사회주의의 전망도 (2004. 1. 1)

□ 가격 현실화

-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농사에 필요한 물, 비료, 영농기구들도 지난날의 ‘공짜나 같은 가격’이 아니라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되게 되었다. 또한 협동농장은 생산된 농산물속에서 토지사용료의 몫을 국가에 납부할 의무도 지니게 되었다”

□ 자금 활용의 자율성

- “일한 것만큼 분배를 받게 되니 농장원이 생산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 협동농장차원에서도 총 수입에서 생산비용을 뺀 나머지 자금을 자기들의 결심에 따라 확대재생산을 위한 비용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다”

- “토지사용료를 내는 것만큼 농장원들은 이전에는 조건이 좋지 않아 농사를 단념했던 토지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궁리를 하게 되었다. 또한 제한된 토지에 무슨 품종을 심으면 가장 실리가 나는가를 생각하도록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협동농장에서는 분배단위가 작업반(80~120명)으로부터 그 아래의 분조(15~20명)로 이행되었다. 지난 시기에는 각 분조의 생산실적에 상관없이 고루고루 분배되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평균주의’가 극복되었다”

<평양의 바람> 변모되는 농촌풍경 (2004. 1. 21)

□ 자금 활용의 자율성

- “남새작업반의 어느 분조에서는 년간의 영농작업을 총화하고 내년의 농사를 설계하였다. 농장원들이 모여서 토의한 결과 농산물의 보관에 필요한 냉장고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자금은 분조가 농산물의 대가로 얻은 현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종전에는 보지 못하던 풍경이다”
- “분조가 쥐게 된 현금은 분조의 결심에 따라 자유로이 쓸 수 있게 되었다. 분조성원들에게 다 나눌 수도 있고 다음해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 “지난날에는 작업반의 생산실적에 따라 분배된 몫이 그 아래에 3~4개 있는 분조에 고루고루 나뉘어졌지만 이제는 분조도 실적이 계산되어 그에 따라 분배를 받게 되었다. 청산협동농장의 경우 생산실적을 계산하는 단위가 80~120명 단위(작업반)로부터 10~15명(분조)으로 이행하였다”
- “농장원들은 년에 한번 결산을 하여 1년 몫의 식량과 현금을 받는데 2003년도 청산협동농장에서는 현금이 1인당 평균 6만원, 가장 많이 받은 분조에서는 한 사람당 12만원을 받았다”

□ 토지사용료 부과

- “협동농장에는 토지사용료가 새로 제정부과 되었다. 농장은 생산한 몫에서 토지사용료에 해당하는 몫을 국가납부를 하게 된다. 또한 농사를 위해 필요한 물, 전기, 비료, 농약 그리고 지원노력 등의 생산비용도 종전에는 ‘공짜나 같은 가격’이었지만 지금은 ‘적절한 가격’이 산출되고 있다”

변혁의 현장에서 - ‘평양대극장봉사소’ 식당재건, 손꼽히는 인기점으로 (2004. 2. 25)

□ 원자재 수급

- “평양대극장봉사소는 동해의 항구도시 청진, 신포의 수산사업소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원자재를 현지에서 직송하고 있다. 나라의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현대 현물의 유통이 제도화되어 자금만 있으면 원자재가 떨어지는 일이 없어졌다”

변혁의 현장에서 - 과학농업을 위한 착실한 걸음 (2004. 3. 6)

□ 과제(프로젝트)단위의 재정관리 시행

- “과제단위 다시 말하여 일감별로 재정관리를 한다는 것은 경제관리에서 하나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종전에는 재정관리를 연구기관단위로 하였다. 그 결과 기관분위주의가 생기고 인력과 설비의 낭비현상이 있었다”
- “예컨대 어느 연구기관에 과학자가 10명 있으면 3명으로 능히 수행할 수 있는 과제라도 10명 몫의 예산을 짜거나 혹은 적당하게 다른 과제를 만들어내는 식이지요. 과제단위로 재정관리를 하면 인재와 설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알곡 800만톤’ 과제는 책임자가 재정을 틀어쥐고 실적도 올리고 소속기관의 차이를 넘어 집결한 과학자들에게 일한 것만큼 생활비도 주게 될 것이다”

변혁의 현장에서 - 버스 운전수의 아침밥은 빵, 콩우유 (2004. 3. 16)

□ 실리주의 확대

-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짙은 여객자동차사업소이지만 지금은 실리주의원칙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이곳 사업소에서는 부설공장에서 다른 기관, 기업소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등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묘향산, 구월산 등 명승지관광을 즐기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버스운행도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묘향산으로 간다면 요금은 한사람 1시간당 30원을 받는다”

- “최대의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관리방법의 개선은 전체 인민의 힘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나라의 경제부흥을 빨리 추진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국가가 ‘혜택’이라는 단어를 외면하고 인민들을 자본주의식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 넣는 것과는 다르다”

평양제1백화점, 흥성거리의 판매점 - ‘적절한 가격’ 으로 상품을 제공 (2004. 3. 27)

□ 가격 책정

- “경제상황이 서서히 풀리고 특히는 재작년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실시되면서 실리주의원칙으로 운영되는 공장·기업소들이 상품을 유통망에 내놓기 위하여 아득바득 노력하게 되었다. 이제는 자기들의 생산물이 상점으로 넘어가야 공장·기업소의 운영자금이 확보되도록 ‘계약’이 맺어져 있다”
- “평양제1백화점을 비롯한 국영상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은 나라가 정한다. 예컨대 평양제1백화점에서는 냉천사이다를 32원으로 판매하고있는데 시내의 음식점에서는 50~55원으로, 시장에서는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된다”
- “시장의 가격을 참조하여 전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비율에 맞게 국정가격도 조절한다. ‘적절한 가격’을 산출해내는 것이다”

변혁의 현장에서 - 한 경기 100원, 늘어나는 보링인구 (2004. 4. 19)

□ 탄력적 요금 책정

- “현재 보링관의 요금은 한 경기당 100원이다. 2002년 7월의 가격조정조치 이전에는 10원이었다. 첫 시기는 조정된 가격이 300원이었습니다. 단번에 30배로 오르니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 “평양보링관 신정호사장에 의하면 가격을 제정하는 상부기관이 전기값 등 운영 경비와 시내 유희장 등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격을 산출하였다고 한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지만 중요한 점을 빠뜨리고있었다. 당면한 ‘식의주’문제가 아닌 문화정서생활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다”